



# 주간 통일정세

2013-30

##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동향    2. 대외관계    3. 대남동향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의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 I. 북한동향

### 1. 대내동향

#### 가. 정치

- **北 김정은, '전승절' 축하 시리아 대표단 접견(7/25,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24일 '전승절(7월 27일·정전협정 체결일)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한 시리아 대표단을 접견해 '친선적이며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서 양국 관계 발전 방안과 '지역 정세를 비롯한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김기남·김양건 노동당 비서와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을 대동하고 압둘라 알 아흐마르 아랍사회부흥당 부총비서를 비롯한 시리아 대표단을 만났으며 하이삼 사이드 북한 주재 시리아 임시대리대사도 배석함.
  
- **北, 인민군열사묘 준공식 중계...김정은·김경희 참석(7/25, 조선중앙TV)**
  - 북한 조선중앙TV는 이날 오후 2시부터 10분간 평양시 연못동 입구에 건설한 '조국해방전쟁참전 열사묘'의 준공식 장면을 내보냈으며 준공식에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박봉주 내각 총리,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김경희·김기남 노동당 비서 등의 고위 간부들이 대거 참석함.
  
- **北김정은·中리위안차오 아리랑 공연 함께 관람(종합)(7/27, 교도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26일 '전승절(정전협정 체결 기념일·7월 27일) 기념행사 참석차 방북 중인 리위안차오(李源潮) 중국 국가부주석과 함께 대규모 집단체조 '아리랑'을 관람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27일 전함.
  - 통신은 김 제1위원장이 평양 '5월1일경기장'에서 리 부주석과 나란히 앉아 '조국해방전쟁(6·25전쟁) 승리 60돌 경축 중앙보고대회'에 참석하고 아리랑 공연을 관람했다고 전함.
  
- **北 김정은, '전승절' 맞아 금수산태양궁전 참배(7/27,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전승절(정전협정 체결 기념일) 60주년인 27일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입상에 자신의 명의로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김 주석과 김 위원장의 시신이 있는 영생홀



에서 '숭고한 경의'를 표시했다고 중앙통신이 전함.

- 이번 참배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박봉주 내각 총리,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김격식 군 총참모장, 장정남 인민무력부장, 김경희·김기남·최태복 노동당 비서,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 김영춘 국방위 부위원장,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등이 참석함.

● **北, 정전 60주년 대규모 열병식…신형무기는 없어(종합3보)(7/27, 연합뉴스)**

- 북한이 27일 '전승절'(정전협정 체결일) 60주년을 맞아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대규모 열병식을 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북한이 정전 기념일에 열병식을 개최한 것은 20년 만에 처음이며, 열병식에서 신형 무기가 공개되지는 않음.
- 오전 10시께 시작한 열병식 주석단에는 김 제1위원장의 바로 왼쪽에 리위안차오(李源朝) 중국 국가부주석이 섰고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김경희·김기남 당비서 등이 함께함.

● **北, '전승절' 맞아 판문점서 이례적 무도회(7/27, 조선중앙통신)**

- 북한 군인들이 60주년 '전승절'(정전협정 체결 기념일)인 27일 판문점 북측 지역에서 노래 공연과 무도회를 열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통신은 공연에서는 전승절 기념곡인 '7·27 행진곡'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찬양곡인 '발걸음'이 무대에 올랐으며 '경축의 춤 바다'가 펼쳐졌으며 군인들의 구호와 노랫소리가 "판문점의 하늘 가에 끝없이 메아리쳐갔다"고 전함.

● **北 김정은, '전승절' 기념 불꽃놀이 관람(7/27, 조선중앙TV)**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전승절'(정전협정 체결 기념일)인 27일 저녁 평양에서 열린 불꽃놀이 행사를 참관했다고 조선중앙TV가 27일 보도함.
- 중앙TV '우리는 승리하리라'라는 제목의 이번 행사는 평양 조국해방전쟁승리 기념탑 광장에서 열린 것을 생중계함.
- 김정은 제1위원장은 야외에 마련된 관람석에 자리했고 전승절 기념행사 참석차 방북한 리위안차오(李源朝) 국가부주석은 김 제1위원장 바로 옆에서 행사를 관람함.

● **北 '전승기념관' 개관식…김정은·중리위안차오 참석(7/28,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27일 정전협정 체결 60주년을 맞아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전승기념관) 개관식을 열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전함.
- 개관식에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



위원장,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 등의 고위 간부가 참석했으며 중국의 리위안차오(李源朝) 국가부주석과 위젠우(于振武) 전 인민해방군 공군사령관도 주석단에 자리를 함께함.

● **北 김정은, 정전기념일에 외신기자들과 첫 접촉(종합)(7/28, 연합뉴스)**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 27일 열린 한국전쟁 정전기념일 행사에서 최고지도자 승계 이후 처음으로 외국기자들과 접촉했다고 연합뉴스가 28일 전함.
- 뉴스 개관식이 열린 '전쟁승리기념관' 안에서는 지원군전람관 참관을 마친 김 제1위원장이 휴식을 취하고 있던 외신기자들 쪽으로 다가오면서 김 제1위원장과 외신기자들 사이에 첫 접촉이 이뤄졌다고 밝힘.

■ **김정은동향**

- 7/25, 김정은 黨 제1비서, 7.24 '전승' 60돌 경축행사 참가 차 방북하고 있는 시리아 대표단(단장 : 압둘라 알 아흐마르 아랍사회부흥당 부총비서) 접견(7.25, 중통)
  - 김기남·김양건(당중앙위 비서), 김계관(외무성 제1부상), 駐北 시리아 대사 참석
- 7/25, 김정은 黨 제1비서 참석下 "조국해방전쟁참전 열사묘(500여명 안치)" 건립(평양) 준공식, 7.25 현지 진행(7.25, 중통·중방·평방)
  - 박봉주, 최룡해, 장성택, 김격식, 장정남, 김경희, 김기남(준공식 시작 선포), 최태복, 김영춘, 양형섭, 강석주, 김원홍, 김양건, 김영일, 김평해, 곽범기, 문경덕, 로두철, 최부일, 조연준 및 전쟁노병 대표 등 참석
- 7/26, 김정은 黨 제1비서, 7.25 중국 부주석 '리원조(李源潮, '리위안차오') 등 北 「전승절(7.27, 정전협정 체결)」 60돌 행사 참석 중국 정부 대표단 접견 및 '시진핑'(중국 주석)의 "구두친서" 접수(7.26, 중통·중방·평방)
  - 김계관(외무성 제1부상) 및 '장업수', '가정안', '진봉상', '병지강', '진위근', '류홍재' 등 배석
- 7/27, 김정은 黨 제1비서, 7.26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 관람(7.27, 중통·중방)
  - 김영남, 박봉주, 최룡해, 장성택, 김격식, 장정남, 김경희, 김기남, 최태복, 김영춘, 최영림, 양형섭, 리용무, 강석주, 오극렬, 현철해, 김원홍, 김양건, 김영일, 김평해, 곽범기, 주규창, 김창섭, 문경덕, 로두철, 최부일, 리병삼, 조연준, 태종수, 김영대등과 여러 나라 대표단 및 대표들, 駐北 외교대표들과 국제기구 대표들이 함께 관람
  - 김정은, 7.26 중국 '리원조' 부주석 등 여러 나라 대표단 단장들 접견(7.27, 중통·중방)



- 김영남, 박봉주, 최룡해, 장성택, 김격식, 장정남, 김경희, 김기남 참가
- 7/27, '전승' 60돌 경축 중앙보고대회, 7.26 김정은 黨 제1비서 참가  
下 5월1일경기장에서 진행(7.27,중통·중·평방)
- 김영남(보고), 박봉주, 최룡해(개회선언), 장성택, 김격식, 장정남, 김경희, 김기남, 최태복, 김영춘, 최영림, 양형섭, 리용무, 강석주, 오극렬, 현철해, 김원홍, 김양건, 김영일, 김평해, 곽범기, 주규창, 김창섭, 문경덕, 로두철, 최부일, 리병삼, 조연준, 태중수, 김영대 등과 중국 부주석 '리원조'를 비롯한 여러 나라 대표단 단장들 참가
- 7/27, 김정은 黨 제1비서, 7.27 '전승' 60돌 기념 금수산태양궁전 참배(7.27,중통·중방)
- 김영남, 박봉주, 최룡해, 장성택, 김격식, 장정남, 김경희, 김기남, 최태복, 양형섭, 김영춘, 김원홍 참석
- 7/27, '전승' 60돌 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 군중시위, 7.27 김정은 黨 제1비서 참석下 김일성광장에서 진행(7.27,중·평방·중통)
- 주석단 : 김영남, 박봉주, 최룡해(경축연설), 장성택, 김격식, 장정남, 김경희, 김기남, 최태복, 김국태, 김영춘, 최영림, 양형섭, 리용무, 강석주, 오극렬, 현철해, 김원홍, 김양건, 김영일, 김평해, 곽범기, 주규창, 김창섭, 문경덕, 로두철, 최부일, 리병삼, 조연준, 태중수, 김영대(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 위원장)와 중국 '리원조' 부주석 등 여러 나라 대표단 단장 참석
- 초대석 : 재일본조선인축하단 등 해외동포대표단과 동포들, 「반제민전」평양지부 대표 참석
-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개관식, 7.27 김정은 참석下 전승기념탑 중심주제 승리상 앞 교양마당에서 진행(7.27,중·평방·중통)
- 김영남, 박봉주, 최룡해(개관사), 김기남(사회), 중국 '리원조' 부주석 등 참석
- '전승' 60돌 경축 '축포야회'(우리는 영원히 승리하리라), 7.27 김정은 참석下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 광장에서 진행(7.27,중·평방·중통)
- 개성시 '축포야회'도 7.27 진행(7.28,중통)
- \* '전승' 60돌 경축연회, 7.27 김정은 참석下 목란관에서 진행(7.28,중통·중방)
- 최룡해(연설), 장성택, 김경희, 김기남, 김영춘, 강석주, 김원홍, 김양건, 최부일 등 참석
- \* 당 중앙군사총과 국방위원회에서도 7.27 옥류관과 청류관에서 연회 마련(7.28,중통)
- 김영남·박봉주(연설), 중국 대표단, 「반제민전」평양지부 대표 등 참석



■ 기타 (대내 정치)

- 당과 국가·군대의 책임일꾼들 등, 7.26 대성산혁명열사능·애국열사능·우의탑과 해방탑에 헌화(7.26, 중통·중·평방) - 김영남, 박봉주, 최룡해 등 참가
- 중국 정부대표단과 양형섭·김양건 등, 7.26 우의탑에 헌화(7.26, 중통·중·평방)
- 러시아조선전쟁노병대표단, 7.26 해방탑과 소련군열사들 모(평양시 사동구역)에 헌화(7.26, 중통)
- 우간다고위군사대표단·몽골정부군사대표단·모잠비크군사대표단·베트남군사대표단·이란군사대표단·탄자니아군사대표단, 7.26 조국해방전쟁참전열사모에 헌화(7.26, 중통)

나. 군사

● 북한군, 정전 60주년 맞아 충성 결의대회(7/24, 조선중앙TV)

- 북한군 장병들이 정전협정 체결(7월27일) 60주년을 사흘 앞둔 24일 평양 인민무력부 청사의 김일성·김정일 동상 앞에서 결의대회를 가졌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함.
-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은 결의대회 보고를 통해 "전군에 최고사령관 동지의 영군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고 김정은 동지의 두리(주위)에 단결하고 단결하고 또 단결해야 한다"고 강조함.

● 北 서해NLL 관할 변인선, 인민무력부 부부장에 임명(연합뉴스; 조선중앙방송)

- 북한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북쪽 황해도 일대를 관할하는 4군단장 출신의 변인선 상장(우리의 중장)이 인민무력부 부부장에 임명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조선중앙방송을 인용해 전함.
- 조선중앙방송은 국방위원회가 정전협정 체결(7월27일) 60주년 행사 참석차 방북한 중국인민지원군 노병(6·25 참전군) 대표단 등을 위한 연회를 전날 평양 고려호텔에서 열었고 연회에 김영춘 국방위 부위원장, 리창근 노동당 부부장, 변인선 인민무력부 부부장, 리병철 항공 및 반항공군 사령관 등이 참석했다고 밝힘.

다. 사회·문화

● 北, 공원·유원지관리법 제정...투자확대 명시(7/22, 연합뉴스; 민주조선)

- 민주조선이 이달 9일과 13일 '법규해설' 코너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최근 공원·유원지 관리법을 제정했다며 법 조항을 소개했다고 연합뉴스가 22일 확인·보도함.
- 5개 장, 48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 법은 공원, 유원지 관리사업의 기본원칙 및 건설, 관리운영, 이용, 지도통제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원, 유



원지의 건설과 관리운영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와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함.

- **北, '전승절' 기념곡 창작자 7명에 훈장(7/2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이 22일 1면에 게재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289호는 전승절 기념곡인 '7·27 행진곡', '위대한 전승의 명절', '전승의 축포여 말하라', '위대한 연대의 승리자들에게 경의를 드린다'의 창작자 7명에게 국기훈장 제1급을 수여한다고 밝힘.
- **북한판 '걸그룹' 모란봉악단, 첫 공훈배우 배출(7/22,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2일 "모란봉악단 배우 류진아에게 공화국 공훈배우 칭호를 수여했다"라며 "이와 관련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결정)이 21일 발표됐다"고 밝힘.
- **북한도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착수(7/22, 노동신문)**
  -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 조짐을 보이는 것과 관련,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2일 개인 필명의 글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 해당 단위들의 역할을 높이고 있다"고 밝힘.
  - 신문은 국경 역, 항만, 비행장에서 위생검역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바이러스 감염 지역에 다녀온 사람들에 대한 의학적 검사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함.
- **김정은 배지, 작년 초 두 종류로 제작(7/22, 연합뉴스)**
  - 북측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관계자 2명은 22일 제5차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이 열린 개성공단에서 남측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김정은의 초상휘장이 나왔느냐'는 질문에 "있다. 2012년 초에 만들어졌다. 동그란 모양과 네모난 모양 2가지가 있다"고 대답했다고 연합뉴스가 22일 보도함.
- **北, 7·27 맞아 대규모 집단체조 '아리랑' 공연 개막(7/23,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대규모 집단체조 '아리랑' 공연이 정전협정 체결 60주년(7월 27일)을 맞아 22일 평양 5월1일경기장에서 개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3일 보도함.
- **北 평남 안주시 80% 침수...이재민 1만여명(7/23, 미국의소리(VOA))**
  - 북한에서 지난해 장마철 홍수로 큰 피해를 봤던 평안남도 안주시가 올해도 또다시 물에 잠겼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3일 보도함.
  - 국제적십자사연맹(IFRC) 프랜시스 마커스 동아시아 대변인 안주시의 80%가 물에 잠긴 것으로 보고됐으며 청천강 범람으로 1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해 이들을 위한 대피소와 깨끗한 물이 필요하다면서



IFRC가 방수막과 물통, 수질정화제, 위생용품 등을 안주시에 보낼 것이라고 말함.

● **北, '전승절' 맞아 대규모 포상 잔치(7/24,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조국해방전쟁(6·25 전쟁)에서 위훈을 세우고 전후 건설에 크게 공헌한 항일의 노투사(빨치산 출신)들과 전쟁 노병, 전시 근로자 4만7천75명에게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돌 기념훈장을 수여했다"고 밝힘.

● **北 '7·27 국제평화대행진' 출정식 개최(7/24,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24일 정전협정 체결(7월27일) 60주년을 맞아 24일 평양 '조국통일3대헌장' 기념탑 앞에서 외국인사들로 구성된 국제평화대행진 출정식을 열고 북·미 평화협정 체결과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철회를 촉구했다고 보도함.  
- 방송은 출정식에 각국 및 국제기구 대표단을 비롯한 외국인사들과 해외 동포들,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숙 대외문화연락위원장 겸 세계인민들과의 연대성 조선위원회 위원장, 최진수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 의장 등이 참가했다고 전함.

● **북한 수해 사망자 28명으로 늘어(7/27, 미국의소리(VOA))**

- 북한에서 장마철 폭우로 인한 사망자가 28명으로 늘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국제적십자사연맹(ICRC)을 인용해 27일 보도함.  
- 북한은 ICRC에 이달 23일 기준으로 폭우 인명피해가 사망자 28명, 실종자 18명, 부상자 2명이라고 보고했다고 이 방송이 전함.

● **北 김광민 감독 "다득점 못해 아쉽다"(7/27, 연합뉴스)**

- 북한 여자축구 대표팀을 이끄는 김광민 감독이 다득점에 실패한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고 27일 연합뉴스가 전함.  
- 북한은 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13 동아시아연맹(EAFF) 선수권대회(이하 동아시아컵) 여자부 3차전 중국과의 경기에서 1-0으로 이김.

● **北, 사이버 교육 확대... '지식 수요 충족' 선전(7/28, 연합뉴스; 금수강산)**

- 북한이 지식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켜 준다면서 사이버교육 확대를 선전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28일 전함.  
- 북한의 대외 홍보잡지인 '금수강산' 7월호에서 '지식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켜준다'라는 제목으로 김책공업종합대학 원격교육대학 김일남 학장의 인터뷰를 실어 전국의 기관과 기업소에서 시행되고 있는 원격교육 현황을 자세히 소개함.





■ 기타 (대내 사회 · 문화)

- 2013년 동아시아컵 축구선수권대회 여자부 2차전 北-日 경기, 7.25 진행 및 0:0 무승부(7.25, 중통 · 중방)

## 2. 대외관계

### 가. 일반

- 파나마 대통령 "北선박서 미그21 · 미사일레이더 확인"(7/22, 연합뉴스)
  - 연합뉴스의 22일 보도에 따르면, 리카르도 마르티넬리 파나마 대통령은 북한 선박 '청천강호'에 미그 21 전투기 2대(1950년대 소련산)와 미사일 레이더 시스템 2개가 실려 있었다고 21일(현지시간) 확인함.
  - 마르티넬리 대통령은 선박 안에는 전선과 전자 장비들도 있었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한편, 하비에르 카라바요 파나마 검찰총장은 "(북한 선박에 실려 있는 것이) 무기류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것이 폐기할 정도인지 아닌지는 전문가들이 평가할 것"이라고 말함.
- 내전 중인 시리아, 北 김정은에 정전 60주년 축전(7/22, 조선중앙통신)
  - 시리아의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회 제1위원장에게 지난 21일 정전협정 체결 60주년을 축하하는 전문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2일 보도함.
  - 아사드 대통령은 축전에서 "조국해방전쟁(6·25전쟁) 60돌에 즈음하여 시리아 인민과 나 자신의 이름으로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각하께서 건강하고 행복하실 것과 조선 인민이 강성부흥을 이룩할 것을 축원한다"며 "이 기회에 시리아와 조선 사이에 존재하는 친선협조 관계가 두 나라 인민들의 이익에 맞게 계속 강화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한다"고 밝힘.
- 파나마 억류 北선박 본격 하역작업 "유엔에 조사일임"(7/23, 연합뉴스)
  - 무기를 싣고 운항하다 파나마에 적발된 북한 선박에 대한 하역작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파나마 당국은 조사를 사실상 유엔에 일임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23일 보도함.
  - 조병립 주파나마 대사는 연합뉴스에 "유엔 조사단이 도착하면 최소한 2~3일가량 정밀조사를 할 것으로 안다"면서 "파나마 정부는 북한 선박에 대한 조사를 사실상 유엔에 일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함.
- 北, 평안북도서 미군유해 발견 주장(7/23, 미국의소리(VOA))
  - 평안북도 구장군 룡연리에서 6·25전쟁 당시 전사한 미군 유해 몇 구가



발견됐다고 북한군 장교들이 방북 취재 중인 미국의 소리(VOA)방송 기자에게 전했다고 VOA가 23일 보도함.

- **북한, 카터 · 아티사리 전 핀란드 대통령 초청(7/23, 교도통신)**
  -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북한 정부의 초청을 받아 평양 방문을 검토하고 있으며 방북 여부를 놓고 수전 리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존 케리 국무장관 등과 협의했다고 교도통신이 23일 보도함.
  - 통신은 북한은 카터 외에도 마르티 아티사리 전 핀란드 대통령도 초청한 상태라고 밝힘.
- **파나마 적십자사, 청천강호 선원 접견(7/24, 연합뉴스)**
  - 파나마 적십자사가 23일(현지시간) 현재 미사일 부품 등 미신고 물품을 싣고 파나마 운하로 들어오다 적발돼 구금된 북한 선박 청천강호의 선장과 선원 35명을 접견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24일 보도함.
  - 하이메 페르난데스 파나마 적십자사 총재는 "의사 3명 등 의료진들이 이들 선원을 만나 건강 문제 등을 파악했다"며 "이는 인도적인 임무"라고 밝힘.
- **中 리위안차오 부주석 北 '전승절' 행사 참석(7/24,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4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의 초청에 따라 중국 공산당 정치국 위원이며 국가부주석인 리위안차오를 단장으로 하는 중국 대표단이 '전승절' 60주년 경축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북한을 공식 친선방문한다고 보도함.
  - 중국 외교부 홍레이(洪磊) 대변인도 이날 오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 측의 초청에 따라 리 부주석이 대표단을 이끌고 25~28일 북한을 방문, '조선전쟁 정전 60주년 기념 활동'에 참석한다고 발표함.
- **북한, 중국 미술시장 공략에 현지 공관 가세(7/24, 중국신문망)**
  - 24일 중국신문망은 주선양(瀋陽) 북한총영사관은 23일 헤이룽장(黑龍江)성 무단장(牧丹江)시에서 시 정부와 공동으로 북한 회화전람회를 개최했으며, 15일간 열리는 이번 행사가 양국 정부 당국이 공동 개최한 첫 북한 미술품 전시회라고 소개함.
- **유엔, 북한 요청으로 수해 지원 실사단 파견(7/24, 자유아시아방송(RFA))**
  - 유엔은 북한의 지원 요청에 따라 평양 주재 유엔아동기금, 유엔개발계획 직원 등으로 구성된 '유엔 실사팀'을 이달 23~24일 북한의 홍수 피해 지역에 파견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4일 보도함.
  - 유엔이 RFA에 공개한 북한 수해현황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으로 홍수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자 24명, 부상자 2명, 실종자 14명 등 모두 40명이며, 특히 평안북도는 사망자 7명, 부상자 2명, 실종자 4명으로



인명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집계됨.

- **美 AP통신사 부사장, 정전 60주년 행사 참석차 방북(7/24, 조선중앙통신)**
  - 존 다니제브스키 미국 AP통신 부사장이 24일 정전협정 체결(7월27일) 60주년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항공편으로 평양에 도착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美 민간단체, 북한 수해 복구 지원(7/25, 자유아시아방송(RFA))**
  - 미국 민간단체 '조선의 그리스도인 벅들'(CFK)이 황해남북도 지역에서 수재민들에게 식량, 정수기, 의약품 등을 지원하는 등 북한 수해 복구 지원에 나선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5일 보도함.
- **中 리위안차오 부주석 방북... "북중, 피로 맺은 관계"(7/25,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전승절'(정전협정 체결일 · 7월27일) 60주년 행사 참석차 방북한 리위안차오(李源潮) 중국 국가부주석 겸 공산당 정치국원은 25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중국 당과 정부의 위임에 따라 (중국) 대표단이 조선전쟁(6·25전쟁) 승리 60돌 경축 행사에 참가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중·조(북) 두 나라 사이의 관계는 피로 맺어진 관계"라고 강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보도함.
- **태국서 탈북자 25명 체포돼(7/26, 자유아시아방송(RFA))**
  - 태국 경찰이 최근 2차례에 걸쳐 탈북자 25명을 체포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6일 현지 언론을 인용해 보도함.
- **北 김영남, 내달 4일 이란 대통령 취임식 참석(7/26, 조선중앙통신)**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다음달 4일 열리는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이란을 방문한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함.
- **中리위안차오, 北김정은 만나 "한반도 비핵화" 강조(7/26, 신화통신)**
  - 북한의 '전승절'(정전협정 체결일 · 7월 27일) 기념행사 참석차 방북한 리위안차오(李源潮) 중국 국가부주석이 25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만나 "중국은 한반도의 이웃으로서 한반도의 비핵화 실현과 평화와 안정 유지 방침을 견지한다"고 밝혔다"고 중국 신화통신이 26일 보도함.
  - 리 부주석은 "중국은 한반도 관련 문제들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해왔다"며 "중국은 6자회담 재개를 추진하고 지역의 평화를 위해 모든 당사자들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하고 중국이 북한과 함께 상호 신뢰와 소통을 강화하고 다방면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며 양국관계를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힘.
  - 이에 김 제1위원장은 북한은 중국의 6자회담 재개 노력을 지지하고 한반



도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해 모든 당사자들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김 제1위원장이 북한은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대외 환경이 필요하다고 말함.

- **北 김정은, 中 시진핑 구두 친서 전달받아(7/26,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전승절'(정전협정 체결일·7월 27일) 행사 참석차 방북한 리위안차오(李源朝) 중국 국가부주석을 접견하고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구두 친서를 전달받았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함.
  - 통신은 리 부주석이 김 제1위원장에게 시 주석의 "따뜻한 인사와 구두 친서를 전달했다"고 전했으나 구두 친서의 내용은 밝히지 않았으며 이 자리에서 김 제1위원장은 "전통적인 조중(북중) 친선을 대를 이어 더욱 공고발전시켜 나가려는 것은 조선노동당과 인민의 확고부동한 의지"라고 강조함.
- **北, '전승절' 60주년 계기로 외교활동 분주(7/26, 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
  - '전승절'(정전협정 체결일·7월27일) 60주년을 하루 앞둔 26일 북한 내부에서 외교활동이 분주하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노동당 대표단은 이날 방북 중인 베트남 공산당 대표단과 회담을 하고 두 당 사이의 친선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문제와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함.
  - 조선중앙통신은 회담에 북한 측에서 김영일 당 국제 담당 비서, 베트남 측에서 쩌 꾸억 부영 당비서 겸 판공실 주임이 참석했다고 전함.
- **北 김정은, 쿠바 라울 카스트로에게 축전(7/26,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26일 쿠바의 라울 카스트로 국가평의회 의장에게 '몬카다 병영 습격' 60주년을 축하하는 전문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김 제1위원장은 축전에서 "몬카다 병영 습격 60돌을 맞으며 쿠바 공산당과 쿠바 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낸다"며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자주적으로 살려는 우리 두 나라 인민의 혁명적 의지가 과시되는 7월에 우리 두 나라 사이의 친선과 단결의 유대가 더욱 강화·발전되리라 확신한다"고 밝힘.
- **北 미술품 창작·판매기구 중국서 성업중(7/27, 신화망; 중국신문망)**
  - 북한이 외화벌이를 목적으로 지난 2011년 중국 헤이룽장(黑龍江)성 무단장(牡丹江)시에 설립한 '북한화가 중국창작기지'(이하 창작기지)가 성업 중이라고 신화망과 중국신문망이 27일 보도함.



#### ■ 기타 (대외 일반)

- 중국대표단(단장 : 中 당중앙위 정치국위원이며 부주석인 '리원조'), 北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와 내각의 초청에 따라 '전승' 60돌 경축행사 참가차 공식 친선방문하게 된다'고 보도(7.24, 중통·중방)
- 北, '정미7조약은 日에 의해 강압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그 무엇으로도 정당화·합리화 될 수 없는 간악한 범죄행위'라고 비난(7.24, 평방)
- 美 해군의 '무인기 X-47B' 이착륙시험을 '亞-太지역 정세악화와 군비경쟁 시한탄, 국제정세 예측 불가 상황' 등 "위험천만한 범죄적 망동"이라고 주장(7.25, 중통·노동신문·중방)

### 3. 대남동향

#### 가. 정치·군사

- 北 "南의 정전협정 기념행사는 전쟁범죄 미화 광대극"(7/2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2일 '전쟁범죄를 미화하는 광대극'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남조선 당국이 '정전 60주년 기념행사' 놀음에 매달리는 것은 패배자의 수치를 가리고 저들의 용납 못할 북침 전쟁범죄 행위를 미화하기 위한 광대극"이라고 주장함.
  - 신문은 "기념행사니 뭐니 하며 소란을 피울 것이 아니라 미제와 함께 지난 조선전쟁에서 당한 참패에서 응당한 교훈을 찾고 범죄적인 동족대결 책동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고 요구함.
- 北 "남북대화, 당국 차원 넘어 확대해야"(7/2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4일 '북남공동선언에 충실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현 시기 북남관계 개선을 위해 절실한 것은 대화와 협력을 적극 실현하는 것"이라며 "그를 위해서는 당국 뿐 아니라 북과 남의 각계각층의 왕대와 접촉, 대화와 협력이 적극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함.
  - 신문은 "남조선 당국자들에게서는 북남관계 개선과 관련한 진실한 마음이나 의지를 보여주는 발언이나 행동은 찾아볼 수 없다"며 남한 당국이 개성공단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실무회담에도 '인위적인 난관'을 조성했다고 주장함.
- 北, 민족단합 강조... "반목·대결 끝장내야"(7/25,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5일 '조국통일의 새 국면을 여는 위력한 무기'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우리 민족이 자주권과 존엄을 빛내자고 해도 그렇고 부강번영을 이룩하자고 해도 북남선언들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 신문은 특히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관철하는 것이 민족공동의 이익을 옹호하는 길이며 그것은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써만 실현할 수



있다"고 밝히고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걱정하고 조국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단합과 연대를 적극 실현해야 한다며 "통일에국역량의 강력한 단결을 통해 북남 사이의 반목과 대결을 끝장내고 평화와 통일의 넓은 길을 열어나가야 한다"고 역설함.

## 나. 경제·사회·문화

### ● 개성공단 회담 또 합의 못해...25일 6차 회담 개최(7/22, 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

- 남북한은 22일 개성공단에서 제5차 당국 간 실무회담을 열어 개성공단의 정상화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문 없이 또다시 회담을 종료했으며 이달 25일 6차 실무회담을 열어 재발방지책과 발전적 정상화 방안 등을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고 연합뉴스가 22일 보도함.
- 수석대표인 김기웅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은 회담 뒤 브리핑에서 "재발방지 부분에 대한 입장차가 가장 크고 우리 측은 재발방지 보장을 위해 북측의 확고한 약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으며, 개성공단의 국제화 문제 등과 관련, "우리 정부와 같은 입장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북측이) 국제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말함.
- 한편 조선중앙통신은 22일 "개성공업지구 정상화를 위한 제5차 북남 당국 실무회담이 22일 개성공업지구에서 진행됐다"며 "쌍방은 합의서 내용을 진지하게 협의했으며 일부 문제는 다음 회담에서 토의하기로 했다"고 관련사항을 짚막하게 보도함.

### ● 남북 개성공단 회담 끝내 결렬...공단 장기폐쇄 우려(7/25, 연합뉴스)

- 개성공단 사태 해결을 위해 남북 양측은 25일 개성공단에서 6차 회담을 열었지만 합의문 채택에 실패하고 추가 회담 날짜도 잡지 못한 채 6차례에 걸쳐 진행된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이 끝내 결렬됐다고 연합뉴스가 25일 보도함.
- 우리 측 수석대표인 김기웅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은 "재발방지와 관련해 북측이 새롭게 제시한 문안으로는 더 이상 논의가 진전될 수 없으므로 오늘 회담을 마무리하고 차기 회담 일정을 잡자고 제의했다"고 밝혔으나 북측은 이에 대해 '회담 결렬'이라면서 "남측이 입장을 철회하고 남과 북이 공동담보를 할 경우에 판문점 채널을 통해 차기회담 일정을 협의할 수 있다"고 주장함.
- 북측 수석대표인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총국 부총국장은 회담 후 기자회견을 자청, "개성공업지구 정상화를 위한 북남 당국 실무회담이 오늘까지 6차에 걸쳐 진행되었으나 아무런 합의도 이루지 못하고 끝내 결렬의 위기에 처하게 됐다"고 주장하고 "남측과의 개성공업지구협력사업이 파탄 나게 된다면 공업지구 군사분계선지역을 우리 군대가 다시 차지하게 될 것이며 서해 육로도 영영 막히게 될 것"이라고 위협함.



- **北, 개성공단 회담 南태도 비난…"회담 파탄위기"(7/26,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6일 "남측은 공업지구 가동중단의 책임이 북측에 있다느니, 피해보상이니 뭐니 하는 심히 무례한 주장만을 고집해 나섰다"며 "오후 4시도 되기 전에 회담을 일찌감치 건너치우고 다음번에 보자는 식으로 노골적인 지연전술에 매달렸다"고 비난함.
  - 통신은 "남측은 개성공업지구 정상화 회담을 파탄의 위기에 몰아넣음으로써 초래될 모든 후과(부정적 결과)의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고 밝힘.
  - 또한 이번 회담에서 재발방지와 관련, "공업지구 중단사태의 원인을 해명하거나 책임문제를 따지자면 끝이 없다"며 "북과 남이 공동으로 공업지구의 정상운영에 저해를 주는 일을 하지 않을데 대해 담보하는 것으로 합의서에 반영할 것을 진지하게 제기했다"고 전함.
  
- **남북 적십자사, 동아시아 적십자회의 동시 참석(7/26, 연합뉴스)**
  - 남북 적십자사 대표단이 오는 29~30일 홍콩에서 열리는 '적십자 동아시아 지도자 회의'에 나란히 참석한다고 연합뉴스가 26일 전함.
  - 이 회의는 남북한과 중국, 일본, 몽골 등 동아시아 지역 5개국 적십자사의 지도자들이 모여 협력을 다지는 자리로 올해는 11월 호주 시드니에서 열리는 국제적십자사연맹 총회 준비 상황에 대해 듣고 의견을 교환하며 남측에서는 고경석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과 김주자 국제협력팀장이, 북측에서는 백용호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집행부위원장 등이 참석함.
  
- **정부, 최후통첩…개성공단 '마지막 회담' 北에 제의(종합2보)(7/28, 연합뉴스)**
  - 정부는 28일 개성공단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한 북한의 명확한 약속이 없을 경우 '중대결단'을 내릴 것임을 천명하면서 북한에 개성공단 문제 해결을 위한 회담을 마지막으로 29일 제안키로 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오후 성명을 통해 "북한은 지금이라도 재발방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해 주기 바란다"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더 큰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중대한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힘.



■ 기타 (대남)

- 우리 정부의 미국에 첨단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260기 및 관련 장비 구매 요청(4억5,200만 달러) 관련 '北을 언제든지 선제타격 할 야망밑에 필요한 공격무기들을 끌어들이려 한다'고 비난(7.22, 중통)
- 한국전 '잊혀진 승리' 발언들 관련 '南 집권세력이 아무리 잊혀진 승리나발을 불어대도 역사의 진실을 결코 가리울 수 없다'며 '참패의 수치를 잊어보려는 가련한 발광'이라고 비난(7.23, 평방)
- 北, '남북공동선언은 자주통일에 대한 온 민족의 염원을 반영하고 지난 시기의 남북합의들을 총 집대성한 조국통일의 지침'이라며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길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하고 실천하는 것'이라고 주장(7.24, 중통·중방·노동신문)
- 우리 국방부의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미국인 선정(한미동맹에 기여한 주요 인사나 참전용사) 포상('백선엽 한미동맹 상') 관련, "하인이 상전에게 상을 준다"며, "푼수 없는 어릿광대 놀음"이라고 조소(7.24, 평방)
- 「범민련」 북측본부 대변인 담화(7.25), 南 공안당국의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대행 등 구속은 '반인륜·반통일적 범죄행위'라며 '보안법 철폐, 통일운동단체 인사들 석방투쟁 전개' 선동(7.25, 평방·중통)

● 북한연구센터 제공





## Ⅱ. 동북아정세

### 1. 대북한 관련

####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한미중, '북핵불용' 재확인...비핵화 대화재개 견해차>(7/22, 연합뉴스)
  - 북핵 대화 재개 방법론을 놓고 한미 양국과 중국이 견해차를 보이는 가운데 1.5트랙(반관반민) 차원의 한·미·중 회의가 22일 서울 국립외교원에서 개최됐음.
  - 그동안 국립외교원 차원에서 진행됐던 '한·미·중 3자 회의'와 달리 이번에는 북핵 문제를 다루는 3국 정부의 실무 담당자가 처음으로 참석했음.
  - 정부측 인사로는 우리 측에서는 이도훈 북핵외교기획단장, 미국 측에서는 로버트 랩슨 국무부 한국과장 겸 6자회담 특사 대리, 중국 측에서는 천하이 주한 중국대사관 부대사가 정부 인사로 자리를 같이했음.
  - 비공개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 한미중 3국은 북핵 불용 입장을 재확인하는 한편, 한반도 정세에 대한 각 측의 평가를 토대로 비핵화 대화를 어떻게 재개할지 폭넓은 의견 교환을 한 것으로 전해졌음.
  - 특히,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서는 대북 제재의 효과와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 여부에 대한 다양한 의견 제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중국 내에서도 변화 여부에 대한 판단이 갈리는 가운데 정부는 중국의 정책 변화를 판단하는 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음.
  - 대북 제재 문제와 관련, 한미 양국은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재와 대화를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 나아가 실질적인 비핵화 대화를 위해 북한이 먼저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 한미 양국은 북한이 북미 2·29 합의에서 약속했던 것 이상을 내놔야 비핵화 대화 재개도 가능하다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음.
  - 이에 대해 중국은 6자 회담의 조속한 재개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국 측에서는 북한이 가진 안보 우려 문제도 같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음.
  - 이는 미국의 적대시 정책 철회와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는 북한의 입장에 다소 동조한 것으로 분석됨.
  - 지난 5월부터 대화 공세에 나선 북한은 계속 핵보유국 지위를 전제로 한 군축대화와 평화협정 체결 등을 요구하고 있음.
  - 6자 회담 의장국인 중국은 이번 회의에서 확인한 한미 양국의 입장을 토대로 비핵화 대화를 재개시키기 위한 여건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됨.



- 한미 양국과 북한간 입장차가 크다는 점에서 중국 외교의 포인트는 6자 회담국간 점점 찾기로 모일 것으로 예상됨. 이는 중국이 한미 양국과 북한 사이에서 적극적인 중재 노력을 펼 것이라는 뜻임.
  - 다만 북한이 '전승절(7월27일)' 이후 다음 달 하순 한미 연례 을지프리덤 가디언 (UFG)연습 등을 계기로 다시 위협 공세로 나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중국의 앞으로 움직임도 이런 북한의 동향과 맞물려 전개될 것으로 보임.
  - 미국과 중국측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구상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음. 참석자들은 앞으로 정부 담당자도 참여하는 1.5트랙 회의를 계속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음.
  - 정부 당국자는 "한반도 관련 당사국들이 한국에 모여 한반도 문제를 진지하게 토의했다"면서 "학자들도 의견을 제시하고 정부 인사들이 이를 경청하면서 소통을 한 것이 좋은 기회가 됐다. 앞으로 이를 발전시킬 첫걸음이 됐다"고 평가했음.
- <청와대 외교수석 "6자회담 재개 몇 달간 힘들 것">(7/25, 미국의소리)
- 주철기 한국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북핵 6자회담이 앞으로 몇 달 안에 열리긴 힘들 것으로 내다봤음. 회담 재개를 위한 전제조건을 놓고 관련국간 조율이 쉽지 않음을 내비쳤음.
  - 주철기 수석은 25일 서울에서 한국국방연구원 주최로 열린 '국방포럼'에 참석해, 6자회담 재개 문제와 관련해 중국이 대화 재개부터 하지는 입장이어서 전제조건을 놓고 관련국들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음.
  - 주 수석은 중국은 북한이 대화를 하겠다고 밝힌 만큼 기회를 주자는 입장이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대화를 하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음. 성과 없는 대화가 또 반복되면 중국도 부담이 될 것이라는 설명임.
  - 미국과 한국과 일본 세 나라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진정성과 상당한 사전 조치가 없으면 대화 재개가 어렵다는 입장임.
  - 또 북한은 대화를 하자고만 할 뿐 핵 포기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음.
  - 주 수석은 이런 차이 때문에 북한이 취해야 할 적절한 수준의 사전 조치를 중국과 조율하고 있지만 빠른 시일 안에 결론이 나긴 힘들 것으로 전망하면서 "중국도 조건이라는 얘기는 안 하지만 뭔가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선불리 지금 만나는 것은 아니고, 상당한 준비 작업이 몇 달 더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언급함.
  - 주 수석은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참가 5개 나라들은 북 핵을 용인할 수 없고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허용할 수 없다는 일치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 따라서 협상이 재개되더라도 과거와 같은 양상으로는 하지 않을 것이고 북한도 이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대화에 나와야 한다고 말했음.



## 나. 미·북 관계

### ● <미국, 북한 유해 발굴 작업 제의 거부>(7/27, 미국의소리)

- 북한이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미군 유해 발굴 작업을 재개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것과 관련해 미국 국방부가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다.
- 미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와 실종자 담당국'의 멜린다 모르간 중령은 26일 VOA에 보낸 전자우편에서 "미국 정부는 인도주의사업인 유해 발굴 작업을 정책 현안들과 연계하고 있지 않지만 북한은 유해 발굴 작업을 여러 해에 걸쳐 진행돼온 연례 미한군사훈련과 연계시켜 정치 이슈화했다"고 지적했다.
- 모르간 중령은 "미국은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 때문에 북한과 공동으로 진행해온 유해 발굴 작업을 중단할 수 밖에 없었다"며 "미국은 북한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줄 때까지 유해 발굴 작업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혀 당장은 북한과 공동으로 유해 발굴 작업을 진행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 모르간 중령은 한국전쟁에서 7천900명 이상의 미군들이 실종됐고 이들 가운데 5천300명이 북한에서 실종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며 미 국방부는 이들 실종미군들을 찾는 일을 계속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 앞서 북한은 '전승절'을 맞아 평양을 방문 중인 VOA 스티븐 허먼 기자에게 미 국방부와 공동으로 유해 발굴 작업을 재개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바 있음.

### ● <“지미 카터 전 대통령, 방북 결정”>(7/27, 자유아시아방송)

- 미국의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방북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 소식에 밝은 북수의 인권 관계자는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곧(very soon)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이번 방북에서 북한에 억류 중인 미국 시민권자, 케네스 배 씨의 석방을 논의할 것으로 안다"고 2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전했다.
- 또 인권 관계자는 카터 전 대통령이 이번 방북에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와 만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내다봤음.
- 북한으로부터 초청장을 받은 뒤 방북 시기를 협의해 온 카터 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면 케네스 배 씨의 인도주의적 석방 문제를 비롯해 북핵 문제를 포함한 양국 간 현안을 논의함으로써 미국과 북한 간 접촉의 물꼬를 틀 가능성이 커 보임.
- 일본의 교도통신은 지난 23일, 카터 전 대통령이 북한의 초청을 받고 미국의 고위관리와 평양방문을 협의 중이라고 보도했으며, 지난 22일에는 카터 전 대통령이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 북한 문제에 관련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 북한이 카터 전 대통령을 초청함으로써 미국과 북한 간 양자 대화의 실마리를 찾으려는 것으로 보이지만, 카터 전 대통령이 방북을 한다 해도 미국 정부는 비핵화와 관련해 북한이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이 마북 관계의 진전에 돌파구가 될지는 미지수임.

- 북한과 대화를 주장해 온 카터 전 대통령은 1994년, 미국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해 당시 김일성 국가주석과 만났으며 2010년 방북에서는 미국인 아이잘론 말리 곱스 씨를 데리고 나왔고, 이듬해에는 '엘더스 그룹'의 전직 대통령들과 함께 북한을 방문한 바 있음.

#### 다. 중·북 관계

##### ● <중국 리위안차오 국가부주석 오늘 방북>(7/25, 연합뉴스)

- 리위안차오 중국 국가부주석 겸 당 정치국원이 북한의 '전승절(정전협정 체결일) 60주년 기념행사 참석차 25일 대표단을 이끌고 북한으로 향함.
- 집단 지도부를 구성하는 7명의 정치국 상무위원에 이어 '서열 8위'로 평가받는 리 부주석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체제 출범 후 방북하는 중국의 최고위급 인사임.
- 그의 방북은 작년 12월 북한이 인공위성을 탑재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고 나서 중단된 중국 고위급 인사의 방북이 재개되는 것을 뜻하기도 함.
- 북한이 최근 국제적인 고립 국면에서 벗어나려고 북중 관계 회복에 공을 들이는 분위기를 고려할 때 리 부주석은 북한에서 김 제1위원장을 만날 가능성이 매우 큼.
- 비핵화 포기과 6자회담 사멸, 정전협정 무효화 등을 선언하면서 한반도 긴장을 크게 고조시켰던 북한은 최근 한국, 미국 등 관련국을 향한 대화 공세에 나서면서 6자회담 당사국 간 대화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중국의 요구에 어느 정도 부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이런 가운데 중국은 리 부주석의 방북을 통해 북한을 달래는 차원에서 전통적인 북중 우호 관계를 지속 발전시켜나가겠다는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관측됨.
- 그러나 북한이 자국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 핵 군축 대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중국은 김 제1위원장에게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핵개발을 수용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완곡한 어법으로 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옴.
- 베이징의 한 외교 소식통은 "리 부주석이 방북해 전통적인 북중 우호를 계승하자는 취지의 언급을 당연히 하겠지만 현재 중국의 처지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북한의 비핵화이므로 이와 관련한 메시지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음.
- 리 부주석 일행은 27일 북한의 전승절 기념행사에 참가하고 28일 귀국길에 오를 예정

##### ● <중 훈춘에 북중관광합작구 건설>(7/25, 자유아시아방송)

- 중국 지린성 훈춘시가 북중 국제관광합작시범구 건설을 추진중이라고 현지에서 발행되는 연변일보가 25일 보도했음.



- 신문은 지린성 관광국이 이 사업을 중점 추진 대상으로 선정해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 훈춘시는 이미 관련 공무원들을 해남, 운남 등 비슷한 환경의 중국내 유명 관광지에 파견해 시범구 건설 가능성을 다각도로 분석했음.
  - 이를 토대로 관광합작시범구 건설을 위한 구상안을 작성했고 시 관광국 주도로 전문 기업에 사업 타당성 평가를 의뢰해둔 상태임.
  - 훈춘시는 이와 별도로 중국내 관광 전문가를 초청해 사업 추진과 관련한 토론회도 열 방침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 북중 국제관광합작시범구 건설의 정확한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절차 간소화와 시설 확충 등 중국인 북한 관광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도입될 걸로 예상
  - 지린성 공안청은 이미 지난 달 28일 훈춘시에 첫 성급 출입국관리소를 설치해 중국인들이 즉석에서 북한 관광을 위한 출국 심사를 마칠 수 있도록 했음.
  - 여권없이 현장에서 바로 1회용 관광통행증을 발급해 북한 관광을 떠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북중 간 변경관광 확대를 유도하려는 조치로 풀이됨.
  - 한편, 중국은 올 해 안에 훈춘에서 북한 나진항으로 연결되는 새 두만강 대교 건설에 나서기로 하는 등 북중 변경지역 개발에 적극적임.
- <中리위안차오, 北김정은 만나 "한반도 비핵화" 강조>(7/26, 연합뉴스)
- 북한의 '전승절(정전협정 체결일·7월 27일)' 기념행사 참석차 방북한 리 위안차오 중국 국가부주석이 25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만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분명한 입장을 전달했음.
  - 이 자리에서 리 부주석은 "중국은 한반도의 이웃으로서 한반도의 비핵화 실현과 평화와 안정 유지 방침을 견지한다"고 밝혔다고 중국 신화통신이 26일 보도했음.
  - 리 부주석은 "중국은 한반도 관련 문제들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해왔다"며 "중국은 6자회담 재개를 추진하고 지역의 평화를 위해 모든 당사자들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그는 "북중관계가 과거를 토대로 미래에 대해 준비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며 중국이 북한과 함께 상호 신뢰와 소통을 강화하고 다방면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며 양국관계를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 이에 김 제1위원장은 북한은 중국의 6자회담 재개 노력을 지지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해 모든 당사자들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신화통신이 전했다.
  - 김 제1위원장은 또 북한은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대외 환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신화가 덧붙였다.
  - 조선중앙통신도 이날 김 제1위원장이 리 부주석을 접견한 소식을 전했다.
  - 중앙통신은 리 부주석이 김 제1위원장에게 시 주석의 "따뜻한 인사와 구두친서를 전달했다"고 보도했음.



- 김 제1위원장은 "전통적인 조중(북중) 친선을 대를 이어 더욱 공고발전시켜 나가려는 것은 조선노동당과 인민의 확고부동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 그는 "조국해방전쟁(6·25전쟁) 시기 조선 인민에 대한 중국 당과 정부, 중국 인민의 사심없는 국제주의적 지원과 중국 인민지원군 용사들이 조선전쟁에 참전해 세운 위훈을 조선 군대와 인민은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리 부주석은 "전통적인 중조 친선협조관계를 끊임없이 공고발전시키는 것은 중국 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이라며 "피로써 맺어진 중조 두 나라 군대와 인민들 사이의 전투적 친선을 대를 이어 고수하고 빛내나갈 사명을 안고 조선을 방문했다"고 말했다.
- 이날 접견에는 북측에서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과 중국 측은 장예쑤이 외교부 상무부부장, 자옌안 인민해방군 총정치부 부주임, 류홍차이 북한 주재 중국대사 등이 배석했다.
- 중앙통신은 회답이 "시종 친선적이며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북한 핵 문제 관련 발언은 전하지 않아 신화통신 보도와 차이를 보였다.
- 앞서 리 부주석은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북한 헌법상 국가수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만났다.
- 이 자리에서 리 부주석은 "이 땅에 준엄한 시련의 시기가 닥쳐왔을 때 중국 인민은 조선 인민과 어깨걸고 싸워 승리를 이룩했다"며 "이 땅에 또다시 전쟁의 불구름이 밀려오는 것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 리 부주석 일행은 27일 북한의 전승절 기념행사에 참가하고 28일 귀국길에 오를 예정

## 라. 일·북 관계

- <일 방위성 '북 미사일 위협 증가, 대응력 확장 필요'>(7/27, 미국의소리)
  - 일본 정부가 향후 10년간의 방위전략을 담은 신방위대강의 중간보고를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능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일본 방위성이 26일 '방위력의 기본방향 검토에 관한 중간보고'를 발표했다. 이는 향후 10년간의 방위 전략을 담은 신방위대강임.
  - 방위성은 북한이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고, 핵무기 개발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언급하는 등 도발적 언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특히 지난 해 12월 장거리 로켓을 발사함으로써 탄도미사일의 사거리가 확대되고 정밀도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 북한의 미사일 개발이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다고 평가했다.
  - 이런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일본 정부는 억지와 대처능력을 재검토해 종합적인 대응 능력을 충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그러면서 일본에 직접적 위협이 미치지 못하도록 방지하고 위협을 받은 경우는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이에 대해 일본 언론은 일본 정부가 적 기지 선제공격 능력을 보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했음.
- 방위성은 또 북한이 미사일 공격과 병행해 게릴라와 특수부대를 동원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대비해 자위대와 주일미군의 운용기반, 원자력 발전소 등 주요 시설 방어 능력을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음.

#### 마. 기 타

- <북한 선박, 지난 4년간 쿠바 적어도 5차례 입항>(7/26, 미국의소리)
  - 미사일 부품 등을 싣고 파나마 운하를 지나다 적발된 북한 선박 청천강 호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은 가운데, 북한 선박들이 지난 4년 동안 적어도 5차례 쿠바를 다녀왔다는 분석이 나왔음.
  - 미국 워싱턴의 민간연구소인 '위스콘신 핵군축계획'은 지난 2009년 이후 청천강 호를 포함한 북한 선박들이 쿠바를 다녀온 횟수가 적어도 5차례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음.
  - 이 연구소는 화물선들의 국제 운항기록을 감시하고 있음. 위스콘신 핵군축계획 측에 따르면 북한의 무두봉 호는 지난 2009년 5월 쿠바 수도 아바나 항에 들렸으며, 이후 2011년에도 아바나 항과 산티아고데쿠바 항에 정박한 기록이 있음.
  - 또 지난 해 4월 북한의 포동강 호는 쿠바의 대표적인 설탕 수출 항인 푸에르토 파드레 항에 들렸고, 어은 청년 호는 한 달 뒤 아바나 항과 푸에르토 파드레 항에 정박한 것으로 나타났음.
  - 위스콘신 핵군축계획은 그러나 이들 북한 화물선들이 카리브해를 지날 때 검색을 당한 적은 한번도 없었다고 전했다.
  - 이 연구소의 매튜 가드시 연구원은 24일 미국 스페인어 일간지인 '엘 누에보 헤럴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통계는 북한이 소유한 선박, 즉 북한 깃발을 꽂은 화물선에만 해당된다며 북한이 편의치적선을 이용할 경우 쿠바를 방문한 정확한 횟수를 알 수 없다고 전했다.
  - 편의치적선이란 세금이나 운영비 혜택 등을 위해 다른 나라에 선박을 등록하고 그 나라의 국기를 단 선박을 말함.
  - 가드시 연구원은 실례로 지난 2011년 5월 미 해군이 중미 카리브해 국가인 벨리즈의 화물선 라이트 호를 검색하려고 했을 당시, 선장이 이를 거부하며 이 배의 실제 소유주는 북한이라고 밝혔다고 말했다.
  - 그러면서 라이트 호는 2006년까지 '부연 1호'라는 이름의 북한 화물선이었다고 덧붙였다. 북한 선박인 우리스타 2호도 최근 파나마에 등록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위스콘신 핵군축계획은 밝혔음.
  - 위스콘신 핵군축계획은 또 선박의 위치 자동표시 기록장치가 꺼진 상태에서 항해할 경우에도 북한 선박의 동향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그러면서 이번에 파나마 운하에서 적발된 청천강 호 역시 이 장치를 끄



고 운항 중이었기 때문에 쿠바의 어느 항구에서 출발했는지도 파악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 한편, 위스콘신 핵군축계획은 청천강 호의 등록된 소유주는 '청천강 쉬핑'이라는 회사지만 명목상 소유주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 실제 소유주는 평양의 '오션 매리타임 매니지먼트사'이며, 이 회사는 청천강호 외에도 화물선 12척 이상과 연계돼 있다는 것임.
- 위스콘신 핵군축계획은 명목상의 회사를 앞세우고 뒤에서 대형 회사가 이를 관리하는 형태는 이란이 국제 제재와 감시를 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법과 비슷하다고 밝혔다.

## 2. 주변국 관련

### 가. 한·미 관계

#### ● <한미, 방위비 견해차 '팽팽'...내달 美서 3차협약>(7/25, 연합뉴스)

- 한국과 미국은 25일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내년 이후 적용할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제2차 고위급협의 이틀째 회의를 이어갔다.
- 이날도 전날에 이어 내년 방위비 분담금 총액을 놓고 집중적으로 협의했다.
- 미국은 자국의 국방비 삭감에 따른 어려움과 방위비 공평 분담 원칙, 북한 위협 증대 등을 이유로 1조원 이상으로 분담금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 알려졌음.
- 우리 측은 주한미군에 지원되는 직·간접적인 비용이 상당하다고 반박하면서 내년도 분담금 총액 인상을 지난해 물가상승률 정도로 최소화해야 한다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음.
- 정부가 제시한 총액은 8천886억 원 정도인 것으로 관측됨. 총액을 둘러싼 양국의 견해차를 줄이도록 양측 대표단은 방위비 분담금 항목별로 증감 요인을 분석하면서 협상을 진행했음.
- 양측은 총액뿐 아니라 인상률을 놓고 대립했음. 방위비 분담금은 기준이 되는 총액에 매년 인상률을 더해 정해지고 있음.
- 가장 최근에 체결된 제8차 SMA에 따라 2009년부터 올해까지는 지난해 소비자 물가지수를 인상률(최대 4% 이내)로 적용하고 있음.
- 우리 측은 이번에도 이런 정도의 인상률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은 상향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분담금 총액이 올해(8천695억 원)보다 크게 증가할 경우 인상률은 예년 수준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나옴.
- 정부의 한 소식통은 "인상률보다는 기준이 되는 총액을 얼마로 할지가 우선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 우리 측은 이미 지급된 방위비 분담금 중 아직 집행되지 않은 금액에





- 대한 투명한 사용계획 제시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 한미 양국은 다음 달 하순 미국에서 3차 고위급 협의를 갖고 입장차 해소를 시도할 예정이다.
  - SMA는 '주한미군 주둔 경비는 미국 쪽이 전액 부담한다'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주둔군 지위협정(SOFA)' 제5조의 예외협정임.
  - SMA는 2~5년 단위로 체결돼 왔으며 지난 2009년 체결된 8차 SMA는 올해 말로 종료
- <미국 하원 외교위, 한미원자력협정 연장안 통과>(7/25, 연합뉴스)
-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는 24일(현지시간) 한·미 원자력협정의 만기를 2년 연장하는 법률안을 가결 처리했음.
  - 한·미 양국 정부가 내년 3월 19일인 이 협정의 시한을 2016년 3월로 늦추기로 합의한 데 따른 후속조치임. 미국에서는 외국과 체결한 협정도 법률이어서 의회가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절차를 거쳐야 함.
  - 개정안(H.R. 2449)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으로 하여금 한·미 간 '평화적인 원자력 사용에 관한 협력 협정(원자력협정)'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로,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이 발의한 것임.
  - 개정안은 이 협정의 연장 기간이 2016년 3월 19일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했음.
  - 법안은 하원 전체회의와 상원도 통과해야 함. 로이스 위원장은 "이 협정의 연장 조치는 양국 정부가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본질적인 사항을 심도 있게 협상할 수 있게 시간을 벌어줄 것"이라고 밝혔다.
  - 한국과 미국은 원자력협정 개정 협의를 벌였으나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와 농축 문제 등 현안에 대한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해 한·미 정상회담 직전인 지난 4월 말 협정 만기를 2년 늦추기로 합의한 바 있음.
- <미국 의회 '한반도 평화·통일' 공동결의안 추진>(7/27, 연합뉴스)
- 미국 의회가 한국전쟁 정전 협정 체결 60주년(27일)을 맞아 한반도 평화·통일을 촉구하는 상·하원 공동 결의안을 추진 중임.
  -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결의안은 상원에서는 이르며 이날, 하원에서는 다음 주 채택될 것으로 예상됨.
  - 팀 케인(민주·버지니아) 상원의원이 전날 발의한 공동 결의안(S.CON.RES.20)은 지난 6월 말 하원에서 한국전에 참전했던 4명의 하원의원이 제안한 결의안 내용과 똑같음.
  - 찰스 랭글(민주뉴욕), 존 코니어스(민주미시간), 샘 존슨(공화텍사스), 하워드 코블(공화노스캐롤라이나) 하원의원은 한국전쟁 발발 63년째인 6월 25일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H.CON.RES.41)'을 발의했었음.
  - 결의안은 한국전쟁 발발 및 정전 협정 체결 등 당시 상황과 현재 한반도 정세를 나열하고 나서 미국 의회가 이 전쟁의 역사적 중요성을 인식해



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또 1950년부터 지금까지 한국에서 봉사하고 희생한 미군과 동맹국 군인들에게 감사하고 미국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음.
- 결의안은 북한에 궁극적으로 평화와 통일로 이끌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 국제 법을 지키고 핵확산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음.
- 상원 결의안에는 발의 당일에만 로버트 메넨데즈(민주·뉴저지) 외교위원장을 비롯해 맥스 보커스(민주·몬테나), 조 도널리(민주·인디애나), 커스틴 질리브랜드(민주·뉴욕), 엘리자베스 워런(민주·매사추세츠) 상원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음.
- 하원 결의안에는 이날까지 39명이 서명했음. 한 소식통은 "내일 워싱턴DC 한국전 참전 기념공원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60주년 기념행사가 열리는 만큼 상원에서는 오늘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하원은 오늘 휴회여서 다음 주 처리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 그는 "상·하원 공동 결의안은 민주당이 장악한 상원이나 공화당이 다수 의석인 하원 가운데 한쪽에서 결의안을 내는 것보다 미국 의회 전체의 의지라는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 ● <美정전60주년 성대한 기념식...오바마대통령 참석>(7/28, 연합뉴스)

- 미국 정부는 한국전쟁 정전협정 60주년인 27일 오전(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한국전의 의미를 되새기고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기리는 기념식을 성대히 거행했음.
- 특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기념식에 참석해 정전협정 60주년의 상징적 의미를 살리고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새롭게 과시했음.
- 오바마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한국전쟁은 무승부가 아니라 한국의 승리였다"며 "5천만 명의 한국인들이 한국인들이 누리는 자유, 활발한 민주주의,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는 한국이 전쟁에서 승리한 데 따른 유업(legacy)"이라고 평가했음.
-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억압과 빈곤에 빠져있는 북한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며 "역사는 어떻게 수십년의 냉전기간 동안 자유국가들이 하나로 뭉쳤는지, 어떻게 전쟁을 이겼는지를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그는 특히 한국전쟁이 '잊혀진 전쟁'으로 평가돼온 데 대해 여기 "미국에서는 어떤 전쟁도 잊혀지지 않는다"며 "한국의 안전보장에 대한 미국의 약속과 헌신은 결코 약화되지 않을 것이며 아시아·태평양지역에 걸친 미국의 동맹은 평화와 안보, 번영을 위한 세력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 오바마 대통령은 "2차대전 이후 급격한 군축으로 미군의 장비는 노후화됐었으나 10년의 전쟁을 마무리하고 군대를 새롭게 정비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의 동맹과 적들은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유지하고 있다"며 "한국전은 미국이 하나로 뭉칠 때 더 강해진다는 분명한 교



- 훈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밝혔다.
- 앞서 우리 측 김정훈 특사는 기념사에서 "정전협정은 단순히 테이블 위의 협상결과가 아니라 끊임없는 전투와 무수한 희생 끝에 체결된 것"이라며 "참전용사들은 아무런 연고도 없는 머나먼 이념 땅에 와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렸으며 한국은 그런 희생의 토대 위에서 자유와 번영을 누릴 수 있었다"고 밝혔다.
  - 헤이글 국방장관은 "한국전쟁은 동맹과 국제기구가 우리의 힘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향력을 확장하는 수단이라는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고 평가했다.
  - 기념식에는 미국 측에서 행정부 요인들 이외에 코리아 코커스 명예의장인 찰스 랭글(민주·뉴욕), 공동의장인 피터 로스캠(공화·일리노이), 마이크 켈리(공화·펜실베이니아), 참전 용사인 하워드 코블(공화·노스캐롤라이나) 하원의원, 존 워너 전 상원의원 등이 자리를 같이했다.
  - 우리 측에서는 박 대통령 특사단 일원인 백선엽 육군협회장과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정승조 합참의장을 비롯해 권태오 육군 중장과 김진형 해군 소장, 노병균 공군 소장, 이해승 해병 준장이 육·해·공군과 해병대 대표로 참석했다.

#### 나. 한·중 관계

- <中, 한국내 중국군 유해 인수 추진 申언론 보도>(7/26, 동아일보)
  - 박근혜 대통령이 방중한 지난달 29일 중국 정부에 제안한 중국군 유해 송환에 대해 중국 주무부서인 민정부(民政部)가 "외교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적절한 인수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국 언론이 전했다.
  - 중국 정부가 박 대통령의 제안을 수락하는 쪽으로 내부 논의 중임을 시사하고 있어 주목됨.
  - 베이징에서 발행되는 신징(新京)보는 25일 '민정부-360구의 지원군 유해 적절히 인수'라는 제목의 전면 기사를 게재했다.
  - 민정부 신문판공실 담당자는 "열사(중국군) 유해 안치와 포양(褒揚·선양)은 우무안치(優無安置·우대 위문 안치)국에서 담당한다"며 "이번 유해 송환 제의는 사회 각계가 주목하는 중대 사안인 만큼 민정부는 외교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적절한 인수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문은 전했다.
  - 민정부의 공식 반응은 아니지만 내부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 중임을 보여줌. 이 사안은 민정부뿐 아니라 외교부와 인민해방군 등도 관련이 있음.

#### 다. 한·일 관계

- <靑 "한일 정상회담 연내 개최에 연연하지 않겠다">(7/23, 동아일보)
  - 청와대는 '한중일 3국 정상회의의 연내 개최나 한일 정상회담 개최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청와대 관계자는 22일 "아베 신조 총리와 그 내각의 왜곡된 역사 인식과 태도가 변하지 않는 한, 한중일 정상회의와 한일 정상회담을 성급히 추진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 이어 "식민지배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한 아베 내각의 태도가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회담을 추진하면 한국이 외교적으로 일본에 회담을 구걸하는 형태가 될 수 있다. 회담을 위한 회담은 악수"라고 설명했다.
- 다른 관계자는 "비록 한중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한중일 3국 정상회의의 연내 개최를 위해 한중이 노력하기로 했다'고 했으나 일본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쫓아다니며 연내 개최를 요청할 경우 역사와 영토문제를 양보하는 꼴이 된다"고 말했다.
- 일본과 역사 및 영토 갈등의 골이 깊은 중국도 3국 정상회의의 연내 개최에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 박근혜 정부는 아베 정부가 과거사, 위안부,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 등에서 진정성 있고 변화된 태도를 보일 경우에는 유연하게 대일 외교를 펴나가겠다는 의지도 갖고 있음.
- 정부 내엔 일본의 태도 변화를 전제로 9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의 성사 가능성을 전망하는 목소리도 있음.
- 반면 아베 총리가 참의원 선거 승리로 최소 3년의 장기 집권을 보장받아 군사 보유를 위한 헌법 개정, 집단적 자위권 확보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한일관계의 냉각기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많음.
- 한일관계 냉각기가 길어질 경우 박근혜 정부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옴.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이 구상이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환경, 원자력 안정 등 연성 이슈에 대한 협력은 역사 문제와 별도로 한중일 간 실무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한일 정상이 만나지 않는다고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 라. 미·중 관계

##### ● <아베-바이든, 동·남 중국해 분쟁 中 압박>(7/26, 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26일 싱가포르를 방문해 동남 중국해 분쟁을 강압이나 무력으로 풀어서는 안 된다며 중국을 압박했음.
- 26일 더 스트레이트즈 타임스 등 싱가포르 언론에 따르면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아베 총리와 바이든 부통령은 회담을 열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동남 중국해 분쟁 등 경제 현안과 지역 안보 문제를 논의했음.
- 이들은 또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와 각각 별도로 만나 아시아지역 영토 분쟁과 TPP, 싱가포르와의 경제 안보 협력 방안을 협의했음.
- 바이든 부통령과 아베 총리는 양자회담에서 미일 안보 동맹 강화에 합의했으며, 바이든 부통령은 아시아로의 군사적 중심축 이동과 관련한



- 일본의 전략적 중요성 증대, TPP의 신속한 추진 등을 강조했다.
- 이와 함께 바이든 부통령은 리 총리와의 회담에서 남중국해 분쟁의 관련 당사국들이 "강압, 위협, 무력사용을 거부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 그는 또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ASEAN)과 중국에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한 행동강령에 신속히 합의하라고 강조했다.
  - 바이든 부통령은 "행동강령을 논의하기로 한 합의에 우리는 매우 고무돼 있다"며 "앞으로 몇 주일 안에 이것이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이에 대해 리 총리는 미국이 동남아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 아베 총리는 리 총리와의 회담에서 아세안과 전략적 외교 및 경제 동반자 관계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아베 총리가 지난해 12월 취임 후 동남아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로, 이는 점증하는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안보, 경제 분야에서 동남아 국가들과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됨.
  - 아베 총리와 리 총리는 △제3국에 대한 사회간접자본시설 공동 수출 △TPP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관련 공동보조 △재난구호 시 양국 군의 후방지원 협력 등에 관해 합의했음.
  - 리 총리는 중국을 암묵적으로 지칭하며 아베 총리와 영토분쟁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며 "관련국들이 이 문제를 평화적이고 국제법에 맞게 해결하고, 이 문제가 지역 안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또 아베 총리는 리 총리와 만난 뒤 '싱가포르 강연' 시리즈의 하나로 행한 연설에서 중국을 겨냥해 아시아를 무력으로 이끈다는 생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그는 "과거나 현재, 미래에 아시아를 이끄는 것은 무력에 의한 강압이 아니다"며 국가간 상호 존중을 강조했다.
  - 아베 총리는 역사 인식 등의 문제로 인해 관계가 악화된 한국과 관련해 "지도자급이나 외무장관급의 솔직한 대화를 갖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바이든 "미국은 태평양의 '상주' 권력으로 남을 것">(7/27, 연합뉴스)
-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은 미국이 태평양의 "상주 권력"으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 27일 더 스트레이트즈 타임스에 따르면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바이든 부통령은 이날 항공기엔진업체 프랫 앤 휘트니를 방문해 이같이 강조했다.
  - 바이든 부통령은 미국의 미래를 위해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이 중요하다고면서 미국은 "태평양의 상주 권력(a resident Pacific power)으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 미국은 지난 2011년 군사적, 외교적 자원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이동시킨다는 중심축 이동 및 재균형 전략을 선언했음.
  -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부담에서 벗어난 뒤 나온 이 선언 이후 미국은 아시아에 대한 군사 전략과 외교, 중국에 대한 견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음.



- 그는 또 중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국가들이 남중국해 영토 분쟁을 관리하기 위해 행동 강령을 채택할 것을 촉구했음.
  - 바이든 부통령은 모든 관련 당사국들은 신속히 노력해 오는 10월 열리는 동아시아 정상회담에서 실질적인 강령을 채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아세안 회원국인 필리핀, 베트남, 브루나이, 말레이시아와 중국, 대만은 남중국해 난사군도를 둘러싸고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음.
- <중·미 인권대화, 30~31일 중국 쿤밍서 개최>(7/28, 연합뉴스)
- 인권을 주제로 한 미국과 중국 정부간 제18차 인권대화가 오는 30~31일 중국 윈난(雲南)성 쿤밍(昆明)에서 열릴 예정임.
  - 미국은 이번 회담에 우즈라 제야 민주주의·인권·노동 담당 차관보 대행을 수석 대표로 파견하며 중국 측에서는 리진화 외교부 국제사(司·한국의 국에 해당) 사장이 수석 대표로 나선.
  - 쟈 사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26일 발표한 성명에서 양국은 이번 대화에서 법치와 종교·언론의 자유, 노동자 권리, 소수민족 권익을 비롯한 여러 인권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미국 대표단은 또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 관리들과 시민사회 대표들과도 만날 계획임.
  - 이번 인권대화에서는 특히 티베트 지역에서 잇따르는 티베트인들의 분신 시위와 신장(新疆) 위구르 자치구 지역의 한족과 위구르족 간 갈등과 관련한 소수민족 인권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임.

#### 마. 미·일 관계

- <일본, TPP협상 첫 참가…농산품 관세유지 관건>(7/23, 연합뉴스)
- 일본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통합을 목표로 내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 23일 처음 참가했음.
  - 일본의 TPP협상 참가에 대한 미국 의회의 심의 절차가 이날 끝남에 따라 일본은 지난 15일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에서 개막된 TPP 18차 회의에 중도 합류했다고 일본 매체들이 전했다.
  - 이에 따라 일본의 쓰루오카 고지 수석 교섭관은 수석대표 회의에 참석했고, 지적재산권 문제 등과 관련한 분야별 협상에도 다른 대표들이 자리했음.
  - 일본 정부는 관세철폐 예외 품목 등에 대한 협의가 이미 끝남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저작권, 모조품 단속 규정을 협의하는 지적재산권 등 일부 분야의 교섭에만 참여하게 됐다.
  - TPP 18차 회의는 투자, 지적재산권, 시장 접근 등 분야별로 나눠 25일까지 진행됨.
  - 일본은 이미 지난 4월 TPP협상에 참가하고 있는 기존 11개국으로부터 협상 참가에 대한 동의를 얻었지만 미국 국내 절차상 행정부가 타 국가



의 협상 신규 참가를 승인하기 앞서 의회의 90일 심의를 거치게 돼 있기 때문에 이날에야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됐음.

- 일본은 쓰루오카 수석 교섭관을 필두로 100명 규모의 협상단을 꾸렸음.
- 미국 등 TPP 협상 11개 참가국은 다음 회의를 오는 8월 중순 브루나이에서 갖는 방향으로 조정중인데 일본은 이때부터 협상에 본격 참가하게 됨.
- 일본은 국내 농가의 입장 등을 배려, 쌀, 보리, 쇠고기 등의 5개 품목은 관세 철폐 예외 품목으로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임.
- TPP는 무역장벽 철폐를 통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다자간 무역협정으로 2005년 싱가포르, 브루나이, 칠레, 뉴질랜드 등 4개국 사이에 체결돼 이듬해 발효됐음.
- 현재 기존 체결국 4개국과 미국, 호주, 캐나다, 멕시코, 베트남, 페루, 말레이시아 등 총 11개국이 TPP 확대 협상에 참가하고 있으며 일본은 지난 3월 협상 참가 의사를 공식 발표했음.

#### ● <日, 위안부 소녀상 미국 건립에 거센 반발>(7/28, 중앙일보)

- 30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제막되는 '위안부 소녀상' 건립을 놓고 일본 정부와 정치인 등이 연일 유감을 표명하고 있음.
-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26일 기자회견에서 "기념비 설립은 일본의 생각과 맞지 않는 것"이라며 "현지 미국 측 관계자에게 적절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며 불쾌감을 표시했음.
- 그는 이어 "정부의 입장은 일관된다. (이 문제를) 정치·외교 문제화해서 안 된다"고 덧붙였다.
- 이날 하시모토 도루 일본유신회 공동대표 겸 오사카 시장도 기자회견을 열어 "세계 각국의 군대가 여성을 이용했다는 점을 경고하기 위한 설치라면 찬성하겠지만 일본군만을 문제 삼으면 중대한 오해가 된다"고 주장했다.
- 그러면서 "위안부를 정당화할 생각은 없지만 미군과 영국군도 전장에서 여성을 이용했다"며 "한국의 주장이 세계에서 멋대로 통하고 있으니 일본도 (이런 입장을) 주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이에 앞서 로스앤젤레스(LA) 일본 총영사관은 지난 21일 LA타임스에 "일본 정부는 위안부에게 사죄했으며 기금(아시아여성평화기금)을 통해 위로금과 의료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는 글을 기고해 간접적으로 위안부상 건립에 반대했음.
- 한편, LA 인근 소도시인 글렌데일 중앙도서관 앞에는 미국 내 한국계 시민단체의 노력으로 해외 첫 위안부상이 건립돼 30일 제막식이 거행될 예정임. 이번에 세워지는 위안부상은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립된 것과 같은 모양
- 한편 또 다른 소도시 부에나파크에서도 위안부상 건립이 추진돼 왔으나 최근 일본계 주민들의 반발로 주춤해진 상태임.
- 실제로 지난 9일 부에나파크에서의 위안부상 건립과 관련한 현지 공청회에 인근 일본계 미국인들이 대거 참가해 "정치색이 강한 것을 공공장



소에 건립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강력 반발했음. 또 LA 주재 일본 총영사도 항의 서한을 부에나파크 시의회 측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 이 때문에 23일 부에나파크 시의회에서 위안부상 건립 여부에 대한 찬반투표가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9월로 미뤄졌음.
- 당초 시의회 의원들 사이에선 위안부상 건립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많았으나 일본계의 반발이 거세자 "좀 더 시간을 갖고 검토하는 게 좋겠다"는 신중론이 힘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 바. 미·러 관계

##### ● <美, 러시아에 스노든 인도 요청 공문 발송>(러 언론)<(7/25, 연합뉴스)>

- 미국 정부가 미 정보당국의 광범위한 개인정보 수집활동을 폭로하고 러시아에 피신중인 에드워드 스노든을 넘겨줄 것을 요청하는 공식 문서를 러시아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 러시아 유력 일간 '코메르산트'는 25일(현지시간) 미 행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러시아에 스노든 인도를 간곡히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보도했음.
- 이 문서는 양국 사이에 아직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스노든을 넘겨받기 위한 공식 문서의 성격을 띤 것이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 소식통은 "미국은 이 공문에서 러시아가 스노든에게 정치 망명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할 경우 향후 미-러 관계가 악영향을 받을 것임을 경고했다"고 소개했음.
- 소식통은 그러면서 미국 당국이 러시아 측과 거의 매일 스노든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음.
- 러시아 당국은 그동안 미국으로부터 스노든 인도를 요청하는 공문을 받은 바 없다고 주장해왔음.
- 지난 6월 말 미 당국의 추적을 피해 홍콩에서 러시아로 피신한 스노든은 여전히 모스크바 세레메티예보 국제공항의 환승 구역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미국 정부가 그의 여권을 말소하면서 신분을 증명할 만한 서류가 없어 공항에 발이 묶인 상태임.
- 스노든은 이같은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지난 16일 러시아에 임시 망명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아직 관계기관인 러시아 이민국으로부터 아무런 답도 받지 못하고 있음.
- 하루 전 일부 언론 매체들은 스노든이 이민국으로부터 망명 신청서 접수 확인증을 발급받았으며 이에 따라 조만간 모스크바 공항 환승 구역을 벗어나 러시아로 입국할 것이라고 보도했음.
- 하지만 이날 공항 환승 구역에서 스노든을 직접 면담한 현지 변호사 아나톨리 쿠체레나는 스노든의 망명 신청서가 여전히 검토 단계에 있다며 그에게 아무런 서류도 발급되지 않았다고 확인했음.
- 전문가들은 통상 망명 신청서 접수 확인증이 1주일 내에 발급되지만 스





노든의 경우는 미국과의 관계 등 복잡한 고려 요소가 있어 지연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한편, 로버트 메넨데스 미 상원 외교위원장은 이날 스노든이 러시아나 다른 어떤 나라에 정치 망명을 하는 것은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음.
- 메넨데스 위원장은 "그(스노든)가 아직 기밀문서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나 어떤 나라가 그에게 망명지를 제공하거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할 경우 이는 곧바로 미국 안보와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 메넨데스는 스노든은 미국에서 간첩 혐의로 기소된 탈영병이나 마찬가지로 그에 대한 러시아의 정치 망명 제공은 미-러 관계를 훼손할 것이라며 "러시아가 그를 미국 당국에 즉각 넘겨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음.

● <미국 법무 "스노든 사형 않겠다" 러시아에 약속>(7/27, 연합뉴스)

- 미국 정부가 정보당국의 개인정보 수집활동을 폭로하고 러시아에 도피 중인 에드워드 스노든을 사형에 처하지 않겠다고 러시아 정부에 약속했다고 AP통신 등 미국 언론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음.
- 에릭 홀더 법무장관은 지난 23일자로 러시아의 알렉산더 블라디미로비치 코노발로프 법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현재 스노든의 범죄혐의는 사형에 처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설혹 사형에 처해질 범죄혐의가 추가 되더라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것을 확실히 보장한다"고 밝혔음.
- 홀더 장관의 이 같은 입장표명은 스노든이 본국으로 송환될 경우 고문을 당하고 사형에 처해질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정치적 망명을 신청한 것이라는 언론보도에 대한 반박 차원임.
- 홀더 장관은 "현재 스노든의 범죄혐의로 볼 때 사형은 선택지에 포함돼 있지 않다"며 "스노든이 이 같은 신변상의 문제를 이유로 정치적 망명을 신청한다는 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음.
- 지난 6월 말 미국 정부의 추적을 피해 홍콩에서 러시아로 피신한 스노든은 여전히 모스크바 세레메티예보 국제공항의 환승구역에 체류하고 있음. 그는 지난 16일 러시아에 임시 망명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관련 당국으로부터 아무런 답도 받지 못하고 있음.
- 다만 러시아의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 대변인은 26일 스노든을 미국으로 송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음.

사. 중·일 관계

● <일본 방위성 "중국군함 5척 일본 일주 항해">(7/26, 연합뉴스)

- 일본 방위성은 중국 해군 구축함 등 5척이 이번 달 일본열도를 시계 방향으로 일주하는 항해를 했다고 25일 발표했다.
- 중국 군함들은 지난 2일 대마도 해협을 통과해 북상, 홋카이도 북단의 소야해협을 거쳐 태평양으로 진출한 후 일본 열도를 돌아 25일 오키나와와 미야코지마 사이 해역을 통과했다고 방위성 통합막료감부(합참 해



당)는 설명했다.

- 방위성에 따르면 중국 군함이 일본을 일주하는 형태로 항해한 것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들 군함은 태평양에서 해상보급과 진영을 갖추는 훈련 등을 실시했음.
- 앞서 방위성은 중국군의 조기경계기인 '원-8' 1대가 24일 처음으로 오키나와와 미야코지마 사이 공해 상공을 오가는 왕복비행을 했다고 발표했다.
- 이에 대해 아베 신조 일본총리는 25일 기자들에게 "그동안 없었던 특이한 행동으로 앞으로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공해상의 비행이기 때문에 항의는 하지 않았지만 외무성이 중국 정부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 이에 대해 중국 국방부 경연성 대변인은 "중국 군용기의 서태평양 비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그 동안 여러 차례 서태평양에서 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 경 대변인은 25일 내신 기자만을 상대로 한 월레 브리핑에서 "인민해방군 항공기가 서태평양에서 훈련한 것은 연간 계획에 따른 정례적인 것으로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며 "중국은 국제법에 따라 해당 해역에서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 중국이 일본 주변 해역에 군함과 군용기를 지속적으로 파견하는 것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과 관련한 대일 무력 시위의 일환이라는 지적이 나옴.

#### ● <중국, 일본에 '전수방위' 견지 촉구>(7/27, 연합뉴스)

- 중국 정부가 일본이 타국에 공격을 당했을 경우에 국한해 방위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고 촉구했음.
- 27일 인민일보 인터넷판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는 일본이 26일 '신 방위대강' 중간 보고서를 발표한 것과 관련, "우리는 일본이 역사를 거울삼고 아시아 이웃 국가의 우려를 존중, 전수방위 약속을 견지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 외교부는 "역사적 이유로 일본의 군사·안보 정책은 줄곧 아시아 이웃과 국제사회의 관심의 대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 일본은 신 방위대강 중간 보고서에서 북한 등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적 기지 공격 능력과 관련, "탄도 미사일 대처능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에 대해 오노데라 이쓰노리 일본 방위상은 "(적 기지) 선제 공격은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아베 신조 내각이 전수방위 개념을 핵심으로 한 평화헌법을 개정하려한다는 우려를 하고 있음.



## 아. 기. 타

● <“미국, 요격시험 실패에도 MD망 전세계 확산”>(7/26, 연합뉴스)

- 미국이 장거리 미사일 요격 시험에 5년간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해 미사일 방어(MD) 시스템의 효율성에 대한 공방이 커지는 와중에서도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이를 세계로 확산하는 작업을 지속하고 있음.
- 미국 국방 전문 '디펜스뉴스'는 25일(현지시간) 미사일 요격 시험에 세 차례 내리 실패하고 나서 본토 MD 프로그램 신뢰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미국 국방부와 군 당국이 일본, 괌, 요르단, 터키, 아랍에미리트(UAE) 등 동맹국에 핵심 레이더 및 MD망의 추가 배치를 서두르고 있다고 보도했음.
- 오바마 행정부는 그 명분으로 북한의 위협과 시리아의 불안, 이란과의 갈등 가능성 등을 들고 있음.
- 미국 미사일방어청(MDA)은 미국, 러시아, 중국이 통제하지 않는 탄도 미사일의 수가 현재 6천300기에서 2020년 8천기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디펜스뉴스는 전했다.
- 미국은 지난 3월 북한의 위협이 커지자 일본과 MD 체제를 공동 구축하기로 하고 일본에 탄도 미사일 추적용 고성능 'TPY-2 레이더(일명 X밴드 레이더)'를 추가 설치하기로 한 바 있음.
- 기존 레이더보다 훨씬 짧은 파장 2.5~3.75cm의 전파를 사용하는 이 레이더는 반경 4천km 이내의 탄도 미사일 형태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탐지 능력이 뛰어난 미국 MD 시스템의 핵심 설비임.
- 괌에도 북한의 잠재적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중거리 미사일 요격망인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THAAD)'를 구축했음.
- 트럭 탑재 발사대를 갖춘 이 시스템을 운용하기 위해 100명가량의 미군이 긴급 투입됐음.
-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도 터키에서 미사일 요격 체계인 패트리엇(PAC) 6개 포대를 이미 운용 중이며 이 가운데 2개 포대가 미군으로 구성돼 있음.
- 미국은 지난달에는 요르단에 오래전에 배치된 패트리엇 포대를 존속시키겠다고 발표
- 디펜스뉴스는 그러나 최근 미사일 요격 시험 실패나 미국 연방 정부의 예산 자동 삭감, 시퀘스터(sequester)로 인한 국방비 감축 등이 미국의 이런 MD망 확산 노력에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평가했음.
- 2013회계연도 국방 예산이 깎이면서 일본 등에 배치하려는 TPY-2 레이더의 구매 계획도 18개에서 11개로 줄었다는 것임.
- 미국 국방부는 이달 초 태평양 상공에서 장거리 미사일을 지상 발사 요격 미사일(GBI)로 격추하는 시험을 했으나 또 실패함으로써 2008년 이후 세 차례 시험에서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음.
- 미국 의회에서 MD 시스템의 효능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고 있음. 덕 더빈(민주·일리노이) 상원의원은 최근 청문회에서 지난 30년간 1천500



억 달러를 쏟아부었음에도 요격 시험 성공률(총 16차례 시험 중 절반 성공)이 너무 떨어지는 게 아니냐고 나무랐음.

- 그는 "잠재적 위협에 대비해 미국 본토를 보호할 미사일 방어 체계가 있다고 해야 할지 의심스러운 정도인데 돈을 더 달라고 요구한다"고 지적했음.

#### ● <일본, 무기수출 3원칙 재검토 공식화>(7/26, 연합뉴스)

- 일본이 분쟁당사국 등에 무기를 수출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무기수출금지 정책에 대해 재검토한다는 내용을 담은 '신(新) 방위대강'의 중간 보고서를 발표했다.
- 교도통신에 따르면 방위성이 26일 공개한 중간보고는 이른바 '무기수출 3원칙'에 대해 "안보환경에 적합한지를 검증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면서 "장래 비전을 보여주는 전략을 책정한다"고 명시했음.
- 무기수출 3원칙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표명한 것으로 '공산권국가,' '유엔이 무기수출을 금지한 국가,' '국제분쟁당사국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국가'에 대해 무기수출을 금한다는 내용이었음.
- 3원칙 자체가 법제화된 것은 아니지만 냉전시대를 배경으로 한 사실상 일본의 무기수출금지 정책으로 받아들여져 왔음. 일본의 역대 정권이 이 때문에 무기수출 3원칙을 평화국가의 상징으로 부각시켜 왔음.
- 그러나 일본이 냉전 종식과 국내 방위산업 육성 등을 내세워 1983년 대미 무기기술 제공을, 2004년 미국과의 미사일방위 공동개발생산, 올해 들어 일본 기업의 F35 스텔스 전투기 부품 제조 등을 3원칙 적용의 예외로 허용하면서 이미 무력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음.
- 한편, 오노데라 이쓰노리 방위상은 "(적기지) 선제공격은 상정하고 있지 않다"며 "우리나라에 명확한 공격이 있는 상태인가, 위협이 되는 사태가 이미 일어나고 있는가를 놓고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또 센카쿠(중국어명: 댜오위다오) 열도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국과의 충돌 가능성에 대비, 낙도 방위를 위한 기동전개 능력과 수륙양용 기능(해병대 기능)을 충실히 하는 방안, 무인 정찰기 도입 방안 등도 중간보고에 포함됐음.
- 아베 내각은 중간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협의를 진행, 올 12월 각의 결정을 통해 신 방위대강의 내용을 확정할 계획임이 방안과 더불어 아베 정권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방향으로 헌법 해석을 변경하는 논의를 활성화하고 있어 올 연말 일본 안보정책의 일대 전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 민주당 정권 시절인 2010년 현재의 방위대강이 책정됐지만 아베 총리가 취임한 직후인 작년 12월 재검토를 지시함에 따라 새 방위대강이 마련되고 있음.

#### ● <아베 "한·중과 정상회담희망"...야스쿠니 자제신호?>(7/28, 연합뉴스)

-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대승한 아베 신조 정권의 대외정책에 관심이 쏠



- 리고 있는 가운데, 아베 총리가 잇달아 한국, 중국과의 정상회담 희망을 피력해 주목됨.
- 동남아 순방에 나선 아베 총리는 지난 26일 싱가포르에서 행한 강연에서 한국에 대해 "일본과 더불어 미국의 동맹국으로 지역 안보의 토대를 이루는 관계이며 경제도, 문화도 함께 걸어가는 관계"라고 규정한 뒤 "정상간, 외무장관간에 흥금을 터 놓고 대화하길 염원한다"고 말했음.
  - 아베 총리는 또 "일본에게 중요한 이웃나라인 중국의 정상과 친근하게 대화할 날을 기대하고 있다"고 부연했음.
  - 아베 총리는 이어 27일 동남아 순방의 마지막 방문국인 필리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기본적인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이라고 전제한 뒤 "현재 외교 당국간에 의사소통을 도모하고 있는 중이지만 차분하고 조용한 분위기 속에 대화를 통해 양국 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고 싶다"며 "정상회담이 가능하게 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음.
  - 중국에 대해서도 "이웃나라이수록 다양한 문제가 생기지만, 끝을래야 끝을 수 없는 관계임을 인식하고 서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조건 없이 가능한 한 빨리 외무장관·정상 수준의 회의를 갖고 싶다"고 말했음.
  - 연이틀 한국,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거론했다는 점에서 작심하고 한 발언이라고 봐야 한다는 게 외교가의 인식임.
  - 아베 총리는 선거 승리 후 국내외에서 개헌과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여론몰이를 하는 등 우파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지적도 나옴.
  - 그러나 부임 이후 정상회담을 갖지 못하고 있는 한국, 중국과의 관계를 방치한채 8·15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시작으로 한 '우경화 질주'를 본격화할 생각이라면 해외에서 연이틀 한국, 중국을 향해 정상회담 제안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음.
  - 더욱이 일본 주류 언론들도 경제 현안에 주력하기 위해 불필요한 외교 갈등을 만들지 말라는 논조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아베 총리가 한국,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희망을 피력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지 않아 보임.
  - 결국 정상회담을 거론했던 아베 총리의 진정성은 한국의 광복절이자 일본의 패전일인 내달 15일이 지나봐야 판단이 가능할 전망이다.
  - 아소 다로 부총리의 지난 4월 야스쿠니 참배를 문제삼으며 윤병세 외교장관의 일본방문을 취소한 한국은 물론 중국도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는 양국관계를 최악으로 몰고갈 것이라는 경고 메시지를 일본에 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또 그에 앞서 현재 일본이 타진 중인 사이키 아키타가 외무성 사무차관의 중국 방문과 그에 따른 중일간 차관급 협의가 성사될지 여부도 아베의 주변국 외교에서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 만약 야스쿠니 문제 등으로 인한 큰 갈등 없이 8월을 보내게 된다면 다음달 5~6일 러시아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한일 정상간 '상견례'의 장이 될 수 있음.



- 한편, 외교 소식통들은 G20기간 한일간에 회의장에서 갖는 즉석 회동 형태의 약식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음.

●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